

건설업과 윤리 경영



잘못된 관행 버리기...건설업 윤리성 회복의 단초

- 산업안팎의 시스템 손질도 관건, 최초의 실천적 프로그램에 기대 -

‘2006년’이라는 새로운 해에 채 적응하지 못한 지난 달 중순, 필자는 모 일간지의 광고에서 눈에 띄는 광고물 하나를 읽게 되었다. 반세기의 역사를 지녀 국내 건설업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한 건설업체의 오퍼가 자신의 비자금 조성을 참회하는 사과문이 커다란 돈다발 사진과 함께 광고로 실린 것이다. 그 광고는 몇 년 전 모빌라에 70억원의 돈다발을 쌓아두었다가 검찰에 적발되어 옥고를 치렀던 이른바 ‘돈침대’ 사건에 대한 참회록이다.

광고가 난 며칠 후 광고의 주인공을 만났다. “비자금은 마약과 같습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일단 맛을 들이게 되면 쉽게 끊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단 것만 찾다 보면 결국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필자가 굳이 클머리에서 이 일을 언급하

는 것은 건설산업, 그리고 건설사업자의 윤리 문제를 논하면서 ‘비자금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비리의 ‘대명사’로 낙인찍혔나

그렇다면 건설업은 왜 우리 사회에서 ‘비리’의 대명사로 낙인찍히게 되었을까?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 내용을 담은 국토연구원 김재영 선임연구위원의 지난해 보고서를 잠시 들여다보자. 각계각층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51.9%로 부정적 이미지(48.1%)보다 약간 많았다. 그나마 긍정적 이미지가 절반을 넘은 것에 위안을 삼을 수는 있겠지만 IT(정보 기술) 등 첨단 업종에 대한 이미지와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 성적표라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

부정적 이미지의 원인으로는 부실 공사와 대형사고(40.3%), 건설기업의 신뢰성 상실(27.4%), 부정부패(18.7%) 등이 꼽혔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건설 기업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8%로 절반이 넘었으며, 아파트 공사비에 대해서는 무려 8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건설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뿌리깊이 박혀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건설산업이 이처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개별 기업의 윤리의식이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 산업 내부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즉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한 중견 건설업체의 경영자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뇌물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혼자 깨끗해서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우리건설업계의현실 이라고말한다. 실제로 잇을만하면터지는각종건설관련 비리에서 우리는 해당 업체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치인, 공공 기관 임직원,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이 줄줄이 엮여 형사 처벌 받는 사례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있다.

아파트 사업을 예로 들어보자. 건설업체 들은 땅을 살 때부터 농지 거러 허가 절차 등으로 공무원등과접촉해야 한다. 인허가 작업이 본격화되면 뒷돈이 오갈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건축 허가와 사업 승인 등을 위해일선지자체의대부분실무부서와일 일이접촉해야하고이과정에서일종의뒷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지고있다.

어려운 행정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작해도 마찬가지이다.“펜스를 치고 첫 삽을 뜨는 순간 온갖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물려와 이리저리돈을뜯어가는것이건설현장 이라는 어느 건설업체 현장 책임자의 하소연은 결코과장이아니다.

‘ 뜯겨도 ’ 책임 면제되진 않아

그렇다고건설업체의책임이면제되지는 않는다. 스스로 ‘ 뜯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실익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들이확인하게되는 건설비리 라는 것은 사업이 잘 안돼 ‘ 뜯은 자 나 ‘ 뜯긴 자 ’ 또는 양자의 관계를 아는 제3자의 폭로에서불거져나오게마련이다.

한시민단체가분석한건설관련뇌물사건 실태를보면대형국책사업은물론단독 주택등개건건축물까지우리사회곳곳에 부정이뿌리박혀있음을알수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전체의 42.5%가공공공사와연관돼있으며아파트 사업이19.6%로2위를이었다. 또한, 뇌물은 주로공사수주나낙찰, 수의계약등주 로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오고간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성 회복, 제도만으로는 기대 난망

물론 정부도 이러한 부정 부패의 고리를 끊기위해다양한제도적보완장치를마련 해 왔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5월 통과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통해공품공여자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품 취득자에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차등되었던형사처벌기준을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강화했다. 이어관련시행령을고쳐지 난해 8월 말부터는 건설 공사와 연관해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건설업자는 8개월 (위반 횟수와 동기 등에 따라 최대 절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 동안영업 정지의처분을받도록했다. 업계전반에만연해 있는 비리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건설산업발전을기대할수없다는위기감에서나온특단의조치인셈이다.

하지만이러한제도만으로건설산업이당장윤리성을회복할것으로기대하는전문가 들은그리많지않아보인다. 이는제도자체 의문제라기보다는제도의실질적운영과정에서비롯되고있는문제이기때문이다.

김경래아주대교수가 2004년부터 2003년까지 건교부의 자체 감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 계약분야에서 유사한 부실및부패유형이매년높은빈도로발생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즉, 입찰및계약 단계에서 설계 도서의 부실, 수의 계약 등 입찰 방법의 부적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평가업무부실등이매년반복되고있다는 것이다.

‘ 잘못된 관행은 버린다는 의식 혁신을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은 우리나라경제에있어서결코무시할수없는 중요한축을담당하고있는핵심산업이다. 건설 투자 금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7.5%를차지하고있으며전체산업인력의 8.2%를건설업이담당하고있다.

추락한 건설산업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방법은건설업계가 ‘ 윤리성 을회복하는 것이다. 윤리성을회복하지못하는한건설 산업은 실제의 산업 기여도와 관계없이 그가치가평하될수밖에없다. 한때어려움을 겪었던대형건설업체의임원은 “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온 관행이회사를위기에빠뜨린가장큰원인 ” 이라고밝힌바있다. 회사에서는개별현장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무조건 독촉했고그과정에서목표를달성하기위한다양한비정상적인수단들이동원되었는데건설업이 호황일 때는 문제가 감춰져 있다가 어려움에 봉착한 후에는 문제가 쏟아터져 회사를더욱어렵게했다는 것이다.

대표적 건설 단체인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을계기로 ‘ 건설업체윤리강령 을마련하고투명사회협약을체결 하는등윤리의식회복을위한적극적인활동을전개하고 있다. 개별건설업체들역시 부정 부패 척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노력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임직원 전체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버리겠다는 의지가전제될때가능한것이다.

어느 중견 건설업체는 최근 40여 억원을 들여 사내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이시스템을만든취지는간단하다. 회사의 모든 정보를 경영자뿐 아니라 직원이면 모두공유토록해 부정이나비리의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임직원 모두가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감시자가 되겠다는 의식의 혁신이 전제될

때 비로소 건설산업 전반에 윤리 의식이 뿌리내릴 수있을것이다. 

정두환
서울경제신문부동산부기자

